

構造的 軍備統制：爭點과 解決方案

朴 東 煥*

차>

- | | |
|-----------------------------|-----------------------|
| 1. 한반도 군비통제의 허와 실 | (1) 한반도의 해무기 |
| 2. 남북한의 국가목표가 군비 통제에 미치는 영향 | (2)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
| 3.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의 상관관계 | (3) 군비의 감축 |
| 4. 구조적 군비통제의 쟁점과 해결방안 | (4) 군사비의 감축 |
| | 5. 결론：통일후의 군비소요와 군비통제 |

1. 韓半島 軍備統制의 虛와 實

南北韓의 軍備統制는 이제 피할 수 없는 現實이 되었다. 베르린 隣壁이 허물어 지면서 시작된 社會主義圈의 崩壞는 드디어 蘇聯邦의 消滅을 招來했으며 그 결과로 지난 半世紀동안 世界를 支配해온 힘의 均衡이 송두리째 혼들리고 있다. 美蘇間의 合意로 이루어진 戰略 및 戰術核武器의 減縮과 部分的 廢棄 그리고 바르샤바條約機構의 解體로 意味가 없어졌지만 유럽에서 在來式 武器를 減縮키로 한 歷史的 協定(CFE) 등은 冷戰體制下에 지속되었던 軍備競爭이 「軍縮競爭」으로 바뀌고 있음을 切感하게 한다. 이렇듯 世界를 휩쓸고 있는 解冰의 氣流는 韓半島에도 강하게 밀려와 冷戰의 마지막 遺產이라고 할 수 있는 南北對決構造에 變化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의 흐름에 對處하여 南北韓이 總理級의 高位會談을 열고 있고 軍備統制를 重要한 懸案으로 다루고 있음은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南과 北의 總理가 서울과 平壤을 오가며 和解・不可侵・交流 등을 協商하고 있고 또 지난 1991년 12월 13일에는 기본적 일개에 合意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軍備統制에 관한 可視的인 結果가 곧 나오리라고 期待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본다. 그 理由는 크게 보아 對內的 및 對外的 두가

*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우선 南北韓의 상황을 살펴 볼 때, 양쪽 중 하나라도 『軍備統制는 꼭 해야 되고 또 해도 된다』는 内部的 合意가 이루어 졌는지 疑問이다. 唯一思想으로 武裝된 北韓社會는 놔두고라도, 근 30年間 南韓을 支配해온 權威主義政權이 對北韓 安保를 至上の 價值로 내세워왔는데, 이제 그 고삐를 늦추는 듯한 印象을 줄 때, 全體 國民이 이에 共感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다. 비록 軍備統制의 當爲性은 모두 認定할 것이지만 정말 軍備統制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異議를 提起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特히 南韓社會를 벼텨주는 큰 기둥인 軍이 軍備統制에 대해 어떠한 態度를 取하는가는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北韓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北의 軍은 將來에 金正日 世襲體制가挑戰을 받게 되면 이를 守護할 唯一한 力量이기 때문이다. 만약 北韓의 軍이 진정한 의미의 軍備統制에 주저한다면 南北會談은 軍事문제에 관해 實質的 合意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 뻔하지 않은가?

對外的으로는 韓半島에 획기적 緊張緩和를 가져올 만한 客觀的 與件이 아직은 未熟함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에서 軍備統制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은 政治·社會的으로 크나큰 變化가 先行되었기 때문이다. 周知의 사실이다. 이에 反해 韓半島에서는 실제로 크게 變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軍備統制에 관한 協商을 成事시키자면 자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南과 北 모두 軍備統制에 관해 수 많은 提案들을 내 놓았고, 또 兩側의 提案을 比較하면 상당한 共通點을 發見하게 된다. 따라서 世界的 네탕트를 背景으로 하여 서로의 共通點부터 협의해서 實踐해 나가면 軍備統制가 쉽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接近方法은 南北韓의 現實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皮相的 思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南과 北이 宣言的 次元을 넘어 實質的 軍備統制를 원했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 왜 허송세월만 해왔겠는가? 한마디로 分斷의 壁은 그렇게 쉽게 뛰어 넘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時點에서 軍備統制 方案, 그것도 裝備와 兵力의 凍結, 制限

(1) 이러한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이 전혀 不必要한 것은 아니다. 일단 軍備統制에 관한 基本的 合意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兩側提案의 共通分母를 찾아 實踐可能한 것 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順理가 아니겠는가? 機能的 接近의 例로는 Goodby(1990), Lim(1991) 및 Ohn(1991) 參照.

및 縮小 등 構造的側面을 論議하는 것은 無意味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軍備統制의 참된 목적은 安保를 增進시키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不利益을 가져다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軍備統制를 體制保護의 次元에서 禁忌視한 것은 南北韓 모두 어찌할 수 없는 内部的 事情때문이었지만, 이제는 軍備統制를 아무런 理念的 색깔없이 있는 그대로 分析하고 受容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軍備統制를 推進한다고 해서 不安을 느낄 정도의 政權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또 그동안 軍備統制에 懷疑的일 수 밖에 없었던 軍도 姿勢를 고칠 것으로 믿어진다. 軍備統制로 軍의 政治·社會的 位相이 그전보다 相對的으로는 낮아질지 모르지만, 國家安保를 지키는 絶對的 地位에는 變化가 없을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軍備統制를 推進해야 하는 더 큰 理由는 韓半島의 情勢變化可能性에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崩壞되기 전의 蘇聯邦이나 東歐의 社會主義體制에서 일어 났던 것 같은 變革이 韓半島에서 發生하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없는 것이다. 軍備統制를 지금 부터 實踐해 나가면 이러한 突發事態가 있어 났을 때 그 衝擊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急激한 變化를豫防하거나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 南北韓 모두 韓半島 情勢의 急激한 變化를 감당할 能力과 與件이 未備한 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軍備統制를 시작해야 할 必要性은 아무도 否定할 수 없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脈絡에서 本稿는 먼저 南北韓의 國家目標가 軍備統制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한 다음, 軍備統制의 두 側面인 運用과 構造의 相關關係를 分析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南北韓 構造的 軍備統制의 重要한 懸案들과 그의 解決方案을 檢討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長期的 眼目에서 본 統一後의 軍備所要와 이를 充足하기 위해 軍備統制의 方向을 어떻게 設定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意見을 提示하고자 한다.

2. 南北韓의 國家目標가 軍備統制에 미치는 影響

1953年 休戰以來 南北韓이 軍備統制에 관해 아무런 實質的 合意를 導出시킬 수 없었던 가장 큰 理由는 兩側의 國家目標가 相異하다는데 있었다. 南

北韓이 제자기 追究하는 安保目標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並存 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北韓政權은 對南赤化統一 戰略을 固守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南朝鮮의 解放을 노리고 있는 北의 指導者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軍備統制의 案을 내놔도 그것은 對南 平和攻勢의 一環이 아니면 國際社會를 겨냥한 宣傳戰에 不過하였다. 南韓의 立場에서 본다면 「直・間接 侵略의 前科者」인 北韓이 優勢한 軍事力を 維持하면서 武力統一의 機會를 엿보고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韓國戰以來 被害者로서의 意識構造를 지니고 살아온 南韓으로서는 北으로 부터 오는 軍事的 危脅을 抑制하는 것이 最上의 安保目標가 될 수 밖에 없었다. 北의 再侵을 豫防하기 위해 南쪽은 당연히 軍事力 建設을 계울리 할 수 없었고, 극적인 상황의 變化가 오지 않는限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展望해도 좋을 것이다. 軍事的으로 劣勢에 있는 南韓은 北과 어느 정도 對等한 水準에 이를 때 까지는 결코 放心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韓半島를 둘러싼 政治・經濟의 環境에 革命的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南北韓 關係가 조금씩 바뀔 기미를 보이게 되었다. 여기서 重要的 것은 이러한 變化가 國際秩序에서부터 起源했을 뿐 아니라 南韓이 韓半島의 情勢變化를 이끄는 主導權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東歐圈의 變革과 南韓의 北方政策은 平壤의 指導者들에게 赤信號로 받아들여졌으며 南韓의 急速한 經濟力 張창과 더불어 金日成父子에게 『무언가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北韓이 世界地圖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不安全感을 안겨 주었다고 하겠다. 어쩌면 韓半島가兩斷된 後 처음으로 南北關係에 있어서 北이 守勢에 몰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半세기동안 政治・軍事・經濟 및 기타 거의 모든 分野에서 攻勢的 立場을 누려오던 北韓이 이제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變化에 受動的으로 對應해야 하게 되었다는 것은 對內・外的으로 커다란 意味를 갖는다. 왜냐하면 過去의 獨善的인 政策決定行態를 버리고 外部의 影響에 유연하게 對應한다는 것은開放社會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主體만을 외쳐온 閉鎖社會에서야 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北韓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 國家의 存廢 自體가 危脅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北의 至上의 安保目標는 現政權의 守護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長期的 眼目에서 본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라든가 祖國의 平和統

一이라든가는 政權守護라는 一次的 目標를 追究하는 데 有用한 슬로건에 不過한 것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지금 南韓과 妥協하라는 壓力を 國際社會로 부터 받고 있을 뿐 아니라 内部의으로도 軍事部門에 들어가는 莫大한 投資費를 民間用으로 轉換해야만 하는 因境에 處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平壤政權은 軍備統制나 信賴構築에 있어서 實質的인 양보를 하기 어려운 立場에 놓여 있다. 너무 오랫 동안 南北韓 對決構造를 지켜 오다가 하루 아침에 平和共存으로 돌아설 경우 北韓의 全體制가 混亂을 맞게 될 것이고 더욱이 南北韓間의 交流增進에서 오는 内部的 副作用을 감당하기가 겁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의 現位置는 이리기도 저리기도 어려운 「安保의 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南韓 역시 一種의 安保 딜레마에 빠져 있는기는 北韓과 마찬가지이다. 北의 至上 安保目標가 政權의 生存이라면 南의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戰爭을 抑制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南韓의 防衛力を 증강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對北韓 軍備統制를 推進해야 하는 데 있다. 게다가 南北韓 모두 宣傳의 次元을 넘어선 實質的 軍備統制를 成就하려면 그동안 힘의 均衡을 지켜 준 軍의 눈치를 봄을 看過할 수 없다.

軍備統制가 어려운 課題임은 南北韓間 安保目標의 差異뿐 아니라 이러한 安保目標를 낳게 한 内部事情이 서로 다른데 起因함을 再三 強調할 필요가 있다. 北韓에게는 破產적전의 經濟를 어떻게 살려 나가 世襲體制를 確定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나. 南에게는 權威主義體制의 崩壞에서 오는 社會의 無秩序와 제조업의 非效率的 運用에서 비롯된 經濟難局을 打開하고 民主化에 成功하느냐의 與否가 國家의 盛衰를 左右할 관전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南北韓의 内部事情이 어느 方向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南北間의 關係가 크게 變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에서는 南北韓의 内部的 製化 可能性을 각기 二分하여 表示하고 있다. 實際로는 世襲의 成功 아니면 失敗 또는 民主화의 成功 아니면 失敗로 豫見하는 것이 無理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豫見의 正確度나 세밀함을 論議하기 보다는 單純한 二分的 模型을 갖고도 南北間의 關係에 대해 많은 것을 示唆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첫째, 北에 金父子 世襲體制가 定着되고 韓이 民主化에 成功하는 A의 경

그림 1. 南北韓의 内部的 變化

		北 韓	
		世 襲 成 功	世 襲 失 敗
南 韓	民 主 化 成 功	A	B
	民 主 化 失 敗	C	D

우, 南北韓 각기 内部的 安定을 이루어 두개의 韓國이 平和的으로 共存하는 時代가 열릴 것이다. 内部的 安定은 對外的 自信感을 낳게 하고 그 結果 兩 國間에 서로의 體制를 尊重하는 태도 안에서 軍備統制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둘째, 南이 民主化에 成功하고 經濟・社會的 繁榮을 누리지만 北이 世襲에 失敗하고 겉잡을 수 없는 混亂에 빠져드는 B의 경우, 이는 韓半島 勢情에 큰 製化를 가져올 것으로豫想된다. 만약 南韓이 美國과 日本의 도움으로 北의 經濟・社會秩序를 떠받칠 수 있게 된다면 北의 漸進的 自由化를 통하여 언젠가는 獨逸式吸收統一도 可能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失敗하여 수백만의 難民이 休戰線 以南으로 넘어 오는 事態가 發生한다면 問題는 심각해진다. 자칫하면 南韓마저 社會的 不安과 이에 따른 體制에의挑戰을 이겨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시나리오 까지도 想像할 수 있게 된다.

세째, 北이 經濟難局을 수습하고 世襲에 成功하는 反面, 南韓이 民主化에 失敗하여 극심한 無秩序 狀態에 빠지는 C의 경우, 北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자기네 식대로의 統一을 成就하려 할 것이다. 어쩌면 南韓內의 左傾・急進勢力이 이 機會를 이용하여『南韓을 그대로 접시에 담아 바치는』상황이 展開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南韓엔 다시 權威主義的 軍事政權이 들어 설 것이고 南北關係는 冷戰時代로 回歸하는 현상이 일어 날 것이다.

네째, 南北이 모두 内部的 安定을 찾지 못하는 D의 경우, 韓半島에는豫測不可能한 事態가 發生할 것이다. 悲觀論者들은 南北이 共滅하는 悲劇的結果를豫想할 것이고, 樂觀論者들은 전혀 새로운 人物과 體制가 登場해統一韓國을 이룩할 契機가 올 것이라고 점칠 수도 있다.

이러한 네가지 可能性 중에서 現在로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A이다. 왜냐하면 政治・社會的 側面에서의 安定뿐 아니라 軍事關係의 改善마저도

가져올 것으로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바램이고 實際로 南北關係가 A, B, C, D 중 어느 쪽으로 가리라고豫見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現實이다. 南北韓의 政策決定者들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A의 상황을 誘導하려고 最善의 努力を 기울이지만 B, C, 또는 D의 事態가 發生했을 경우에 被害를 最少化하는 危機管理의 能力を 키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3. 運用的 軍備統制와 構造的 軍備統制의 相關關係

南北韓의 安保目標가 다르고 또 각기 相異한 内部的 制約을 갖고 있기에,過去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南北協商이 빠른 속도로 進歩되어 政治·軍事·經濟·文化 등 여러 部門에서 實質的 成果를 거두리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해서 南北對話에 臨하는 北의 立場에선 「政經分離」를 追究할 것이고 이와 反對로 南쪽은 여러 分野에서의 交流를 通한 信賴構築을 願할 것이 分明하다. 政權과 國家의 死活이 동시에 危脅받고 있는 北韓은 어떻게 해서든지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해서 經濟를 살려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經濟的 門戶開放이 社會全體의 開放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最大限의 努力を 기울여 『우리식대로 살자』는 캠페인을 持續할 것이다.⁽²⁾ 그러나 南韓의 處地에서는 北의 再侵危脅이 사라지지 않은 마당에 北韓이 内部的 變化 없이 工業化에 成功하는 것을 도와 주고만 있자니 不安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北의 經濟破綻을 坐視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北韓經濟의 崩壞는 南韓에게 吸收統一을 強要하거나 아니면 戰爭의 再發을 意味할 수 있기 때문이다.

南北의 이렇게 相異한 立場이 가장 分明하게 드러나는 分野가 軍備統制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게 내놓은 兩側의 軍備統制案을 比較해 보면 아주 뚜렷한 추세를 發見하게 된다. 다음 아니라 南韓은 軍事的 信賴構築을 強調

(2) 現在 北韓의 處地는 어느 面에서는 明治維新의 日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西洋의 技術을 들여와 開化는 하지만 西洋의 思想은 排擊하여 日本의 傳統文化를 지키려한 것에 비유하면, 北韓은 文化的 遺產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政權을 守護하려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日本의 경 우에서 본 바와 같이, 西歐文明의 物性的인 面과 精神的인 面을 分離한다는 것이 短期的으로는 可能하지 물라도 긴 歷史的 眼目에서 보면 눈 가리고 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北의 指導者들도 곧 깨달으리라는 점이다.

하는 反面에 北韓은 軍事力 減縮에 注力하는 傾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南과 北 사이에 信賴를 키움으로써 平和를 定着시키려는 南의 立場에서는 당연히 運用的(Operational) 軍備統制에 重點을 둘 수 밖에 없겠지만, 社會의 門을 그대로 닫아 둔채 過重한 軍事費의 負擔을 줄여 보려는 北의 경우에는 構造的(Structural) 軍備統制를 優先시키는 것이 自明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軍備統制는 相互 對峙하고 있는 敵對國들이 兵力과 武器의 使用을 規制하기로 合意하여 共同의 安保를 增進시키려는 데 主目的이 있다. 概念의 側의상 軍備統制는 運用的 軍備統制와 構造的 軍備統制로 나뉘며, 前者는 軍事力의 運用과 戰鬪準備 態勢를 規制하는 것이고 後者は 軍事力의 規模와 構成을 制限함을 指稱한다. 運用的 軍備統制에서 다뤄지는 案件들로는 (1) 戰鬪 및 支援部隊들의 訓練, 演習과 配置, (2) 戰鬪用 및 特殊 裝備의 配置와 備蓄, 그리고 (3) 資料와 情報의 交換 및 各種 査察을 통한 檢證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運用的 軍備統制는 兵力과 裝備의 凍結, 制限 및 縮小를 目的으로 하는 構造的 軍備統制를 補完하는 性格을 띠게 된다.⁽³⁾

그동안 유럽을 포함하여 軍備統制에 成功한 事例들을 살펴 보면 대체로 運用的 側面에서 시작하여 構造的 調整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發見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軍備統制가 運用에서 構造로 옮겨 가는 「線形 發展 模型」에 만 의존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물론 當事國들이 相對方의 軍事力에 관해 幅넓은 이해를 갖고 相對方兵力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면, 이러한 「透明性」(Transparency)의 增大는 궁극적으로 軍備의 縮小로 發展한다는 論理는 높은 說得力を 가진다. 그러나 軍備統制의 實相을 들여다 보면 이 論理가 다분히 수박걸壑기식 觀察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게 된다. 이에 관해 세가지 問題點만 指摘해 보고자 한다.

첫째, 運用的 軍備統制가 當事國間에 信賴를 構築하는데 기여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限界가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근본적으로 政治的關係가 好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運用的 軍備統制를 論議해 봤자 이는 構造的 軍備統制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풀어온 相互均衡軍事力減縮(MBFR) 協商이 東西陣營의 政治的 對決構

(3) 軍備統制의 概念的 問題點들을 理解하는 데는 Davis(1988)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造안에서 成功할 수 없었던 것에 反하여, 東歐圈의 變革이 유럽在來式戰力減縮條約(CFE)을 가져온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기야 軍備統制의 軍事的 目標가 잠재적인 攻擊者の 攻擊能力을 弱化시킴과 동시에 防禦者の 防禦能力을 強化함으로써 戰爭이 일어 났을 때 防禦者の 勝算을 높이는 데 있음(Davis, 1988:11)을 감안하면, 軍備統制의 成功은 敵對國들이 戰爭 보다는 平和를 願하고 또 相對方을 믿어도 되겠다는 分위기가 있었을 때에야 可能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둘째, 構造的 側面과 連結시키지 않고 運用的 軍備統制를 推進하다보면豫期치 못한 副作用이 따를 수 있다. 一例로 北韓은 南韓과 軍事「핫라인」設置와 같은 극히 初步의in 것에 合意해 놓고는 이를 마치 대단한 軍備統制의 進展인양 宣傳할 可能性이 있다. 美國과 日本의 도움이 必要한 北韓으로서는 實際야 어떻든 國제적으로 「착한 아이」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運用的 軍備統制과정에서 兩側 모두가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할 道理가 없다. 아무리 資料를 交換하고 各種의 檢證을 한다 해도 『도둑 하나를 열 마리의 개가 막지 못하는 것』은 어이 할 수 없는 일이다. 軍事力を 攻擊的 姿勢에서 防禦的 布陣으로 바꾸는 過程에서 相對方을 조금씩만 속인다고 가정하면 곁으로는 軍備統制를 하지만 속으로는 兩側 모두에게 安保를 저해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 너무도 뻔하다. 그러므로 構造的 軍備統制에 대한 默視的 合意가 없는 運用的 軍備統治는 별로 큰 效果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째, 運用的 軍備統制는 當事國들에게 크고 작은 經濟的 負擔을 안겨 준다. 특히 相對方 軍事力を 檢證하는 體制를 수립하고 維持하는 일이라든가 前方에 攻擊形으로 配置된 兵力과 裝備를 後方으로 옮기는 作業 등은 莫大한 經費와 時間을 菲요로 한다. 軍事部門에의 投資를 줄여 보자고 시작한 軍備統制가 오히려 더 큰 投資를 불러 일으키는 逆設的 結果를 낳는 것이다. 長期的 次元에서의 安保增進을 얻기 위해 短期的으로는 값비싼 軍備統制方案을 採擇해야 함이 不可避하겠지만, 이왕이면 負擔이 적게 드는 쪽을 選好하게 될은 人之常情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費用이 많이 드는 運用的 軍備統制의 단계를 거치지 말고 차라리 經費切減의 效果가 큰 軍備制限이나 縮小로 直行하는 것이 어떠냐는 論理가 成立한다. 例를 들어 休戰線 부근에 集中 配置된 南北韓의 軍事力を 一定距離 뒤로 移動시키는 方案을 檢討하다

보면 前線을 새로 만드는데 드는 投資가 天文學的 規模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경우 休戰線에 있는 兵力과 裝備를 서로 減縮한다면 先制攻擊의 危脅을 줄이고 經費도 節約하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運用的 軍備統制는 構造的 軍備統制를 代替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또 軍備統制協商에서는 運用과 構造의 두側面을 한데 묶어 推進해야지, 어느 한 쪽만 지나치게 強調하면 所期의 目的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한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檢證(運用의側面)없는 減縮(構造의側面)은 無意味라고 減縮없는 檢證은 經費負擔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運用과 構造를 연계시키는 方法에 있어서는 반드시 「線形 發展 模型」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當事國들의 合意만 끌어 낼 수 있다면 어떤 方式이라도 받아들일 유연한 姿勢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어떤 때는 運用과 構造를 同時에 協商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構造의 調整을 먼저 하고 그후에 運用의 細部 事項을 협의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래 運用과 構造를 區分하지 말고 軍備統制의 모든 爭點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자유롭게 골라 가며 討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南韓은 運用的 軍備統制를, 北韓은 構造的 軍備統制를 選好하는 傾向을 보여 왔고 이는 兩側의 内部事情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임을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兩側의 接近方法의 差異가 軍備統制協商의 進展을 막아온 큰 理由중의 하나임을 염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진실로 韓半島에서 軍備統制를 願한다면 南北韓은 運用이나 構造의 先後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主張을 해야 했던 相對方의 立場을 理解하려는 努力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從來의 主張에서 한발씩 물어서는 勇氣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軍備統制에는 政權의 次元을 넘어 韓民族의 死活이 걸려 있고 運用과 構造의 側面은 결국 不可分의 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4. 構造的 軍備統制의 爭點과 解決方案

그리면 南北韓間의 軍備統制 協商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爭點(Issues)들은 무엇인가? 특히 構造的 側面에서 볼때 重要한 懸案은 어떤 것들일까?

南北韓이 軍事會議을 열고 軍備統制를 論議하다 보면 期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問題들이 爭點으로 떠오르겠지만, 本節에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深刻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爭點들을 舉論하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의 解決方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이 爭點들은 (1) 韓半島의 核武器, (2) 駐韓美軍의 將來, (3) 軍備減縮, 그리고 (4) 軍事費減縮이다.

(1) 韓半島의 核武器

지금 全世界의 耳目은 北韓이 推進중인 것으로 알려진 核武器 開發計劃에 쏠려 있다. 주로 美國과 프랑스의 첨보衛星들이 찍은 寫眞들을 判讀한結果, 北韓은 平壤 北方 90km 거리에 있는 寧邊부근에 核關聯 施設物을 稼動중이고 또 寧邊 南西쪽 博川시까지 東北 4km 부근 산중에 原子폭탄원료인 플루토늄의 分離設備 등을 分散配置시키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⁴⁾ 美國의 情報機關에 의해 거의 確認된 것으로 알려진 寧邊의 核施設은 研究用 原子爐一基, 30㎿가와트짜리 重水型 原子爐, 200㎿가와트짜리 原子爐, 우라니움濃縮工場 및 플루토늄 再表理工場을 包含하고 있다. 이중 研究用 原子爐는 1960年代에 蘇聯의 技術로 만들어졌고 30㎿가와트짜리는 1987年부터 稼動되고 있다. 200㎿가와트짜리 大型原子爐는 곧 完成될 것으로 믿어지며 플루토늄 再處理工場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둘이 完工되면 北韓은 原子彈의 量產體制에 들어 가는데 그 時期는 빠르면 앞으로 1~2年内가 될 것으로 보인다.⁽⁵⁾

北韓의 核武器 開發이 이렇듯 實現 단계에 들어가자 核武器擴散에 지극히 敏感한 관심을 나타내 온 強大國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第3世界의 非友邦國이 核武器를 開發하는데 알레르기性 反應을 보이고 있는 美國이 主軸이 되어 北韓의 核武器 開發을 中止시키려고 團合된 努力を 기울이고 있다. 日本은 對北韓經濟協力과 國交正常化를 核問題 타결전에는 안하겠다는 立場이고 中國과 蘇聯/러시아도 北韓에게 核安全協

(4) 博川 부근에서 核武器에 관련된 設備로 推定되는 施設物을 發見한 것은 日本의 도카이(東海)大學 情報技術센터의 사카다 도시부미(坂田俊文)教授이다. 사카다 教授팀이 使用한 資料는 프랑스 國立宇宙研究所의 地球觀測衛星기록 畫像이었으며, 이 팀은 같은 方法을 통해 寧邊의 核關聯施設을 世界에서最初로 發見하여 發表한 것으로 有名하다(朝日新聞의 時事週刊誌 아에라(AERA) 1991. 11. 5 | 字 參照).

(5) 北韓의 核武器 開發에 대한 詳細한 論議는 Park(1991) 參照.

定締結을 강력히 종용해 왔다.

한편 北韓이 製造한 核武器의 危脅을 直接받게 되는 南韓의 立場에선 北韓의 核보다 더 큰 安保의 爭點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北韓은 改良型 스카드-B 유도탄 등으로 南韓 全體를 射程圈안에 두고 있지 않은가? 또 南韓의 官民을 더욱 不安하게 만드는 것은 核危脅 그 자체뿐이 아니라, 韓半島의 核武器를 爭點化하고 이의 解決을 위해 協商하는 過程에서 南韓이 一次的 當事國이 되기 보다는 들러리를 설 수 밖에 없지 않나하는 愚慮이다. 韓美安保關係의 特殊性 때문에 그동안 南韓은 核武裝選擇權(Nuclear Option)을 行使할 수 없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⁶⁾ 核武裝選擇權이라는 莫强한 카드가 없는 테다가, 雪上可霜으로 美國의 부시大統領은 1991年 9月 28日 韓國에 配置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戰術核武器를 포함하여 美國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地上 및 海上發射 단거리 核武器를一方的으로 廢棄하거나 撤收할 것을 宣言했고 이에 호응하여 고르바초프는 10月 5日 모든 단거리 戰術核彈頭의 廢棄를 포함한 核武器減縮宣言을 發表했다. 그후에 蘇聯邦의 解體로 蘇聯이 保有하고 있는 核彈頭를 廢棄하는데 보태쓰라고 美議會는 5億弗을 책정하였다. 또 美國의 戰術核一方的撤收가 계속되어, 12月 18일에 盧泰愚大統領은 韓半島의 남쪽에 단 하나의 核武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核不在宣言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核不在宣言에는 그것이 盧大統領의 「11·8」韓半島非核化宣言의 후속조치라는 모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韓半島의 核論議에 있어서 南韓의 체면을 살려 주려한 美國側의 配慮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月 以後의 發展상황을 돌아 보면 北韓은 1985年에 調印한 核擴散禁止條約(NPT)의 當事國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義務인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查察을 계속 拒否하고 있고 또 查察에 先行해야 할 核安全協定의 署名마저도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지연시키고 있다. 北이 核查察을 拒否할 根據를 없앤다는 名分에서 南韓이 核不在宣言까지 하게 된 것과 比較하면 이는 전혀 均衡이 맞지 않는 處事이다.

(6) 核武裝選擇權은 核武器開發能力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南韓은 1970年代와 80年代에 核武器開發體制를 세우려다 美國의 介入과 反對로 失敗한 經驗을 갖고 있다. 盧泰愚大統領의 第6共和國에서는 自體 核武器 開發에 대해 一體의 論議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南韓의 核武器 開發努力이 어떻게 挫折되었는가는 Park(1990)에 歷史的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 일이 어찌하다 이렇게도 南韓에게 不利하게 進行되었나? 南韓이 『모든 것을 다 주다』시피했는데 北韓은 實質的 讓步를 하지 않은 背景을 理解하려면, 南韓이 美國의一方的 核廢棄政策에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던 사실 以外에도 北韓側의 立場과 思考를 짚어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北韓은 核武器를 開發하여 무엇에 쓰겠다는 것일까? 核武器 生產能力까지는 갖추되 製造는 안하는 代價로 美國과 日本으로 부터 政治·經濟的 報償을 받자는 것이 主目的은 아닌가? 이러한 質問들에 대한 答을 求하는 데 세가지를 考慮해야 한다.

첫째, 核武裝選擇權은 北韓이 對內·外의으로 맞고 있는 危機局面을 打開하는데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内部의으로 經濟難局을 모면하고 金父子에 대한 挑戰을 막는데 核武器 開發처럼 欲싸고 效率의手段도 드물 것이다. 물론 長期의으로는 核武器를 가졌다고 해서 社會의 凝集力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短期의인 眼目에서 北韓住民들의 自矜心을 높이고 金父子에 대한 忠誠心을 高揚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對外의으로도 對美·日 協商에 核開發만큼 欲싼 카드가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UN에 南韓과 同時에 加入함으로써 國際社會에 入門하는 要式行爲는 치뤘으나, 北韓이 西方으로 부터 信賴를 얻기 위해서는 美國의 外交的 承認을 받는 것이 必須의이다. 또 經濟危機를 克服하려면 가까운 富者이 웃인 日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代價를 支拂해야 하는데, 이때에 核武裝選擇權을 포기하는 것 만큼 편리한 것도 없을 것이다. 만약 核카드가 없었다면 美國과 日本의 援助를 받기 위해 北韓은 무언가 實質的인 것을 내줘야 했을 것이다. 蘇聯의 軍援을 받고자 蘇軍機의 領空飛越權과 蘇軍艦의 寄港權을 내줘야 했었고 中國의 환심을 사기 위해 白頭山의 境界線을 讓步한 前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核武器 開發은 北으로서는 치밀한 國際政治·經濟的 계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北韓의 指導者들은 核保有國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奎망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視角에서는 核擴散禁止條約은 核을 이미 保有한 「核클럽」(Nuclear Club)의 會員國들이 자신들의 既得權을 保護하려고 만든 不平等協約일 수도 있다. 또 過去 中國의 例를 보더라도 일단 核武器를 生產하게 되면, 이를 制裁하기 보다는 核클럽에 받아들여 核武器의 責任있는 管理에 더욱 신경을 써온 것이 慣行이다. 따라서 北韓은 어떻게 해서든지 時間을 벌

어 原暴量產에 들어 가기만 한다면 強大國의 隊列에 낀 것이라는 꿈을 지금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째, 北의 核武器 관련 施設에 대해 美國이나 韓國이 先制攻擊을 敢行할 可能性이 적다고 北의 軍事指導者들은 判斷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南韓空軍이 갖고 있는 最新銳 F-16機들이 夜間에 北의 防空網을 침투해 寧邊의 核施設物들을 「外科的으로 파괴」(Surgical Strike) 할 能力이 없음을 北이 모를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南韓의 先制攻擊은 奇襲의 效果를喪失하고 全面戰으로 擴大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反해 夜間침투장비를 갖고 있는 美軍機들이 攻擊에 나선다면 이는 北에게 駐韓美地上軍을 攻擊할 빌미를 주게 되며 걸프戰의 경우와는 달리 美軍이 莫大한 人命被害를 입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南韓人口의 40퍼센트가 몰려 있는 서울地域과 穢動中인 原子力發電所들이 攻擊 받게 되는 것을 南韓이 결코 견뎌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南韓政府는 설령 美側이 先制攻擊을 提議하더라도 이를 말려야 할 立場에 處하리라는 것을 北은 간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北의 核武器 開發은 자기네로서는 政治·經濟·軍事의으로 아주 合理的인 決定에 의해 推進해온 政策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對應하는 南韓의 姿勢는 어떠해야 하는가? 理論的 次元에서 보면 北의 核武器 開發은 南에게도 政治·軍事의으로 좋은 찬스를 갖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南韓이 政策을 決定하는데 運身의 幅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그 幅은 한쪽으로는 極右의 性向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는 極左에 까지 이를수 있는데, 前者の 例로는 『그동안 美國 때문에 못했던 自體 核武器 開發을 이제는 試圖해야 한다』는 主張을 들 수 있고 後者の 경우로는 『北의 核武器 開發이 美國때문이니 모든 責任은 美國이 져야한다』는 論理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南韓政府는 이렇게 넓은 左右의 幅사이를 왔다 갔다하며 때에 따라 그에 適切한 政策을 採擇하고 執行할 수 있어야 한다. 韓美間의 미묘한 經濟 및 軍事關係를 有利하게 展開시키는데 南韓은 核政策을 效率의으로 使用할 수 있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 日本의 霸權國化를 자연시키는데도 이를 援用할 수 있다고 본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몇달동안 南韓政府가 내 놓은 政策들을 보면 南韓이 이러한 黃金의 찬스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우선 1991年 12月 13日 서울에서 열린 第5次 南北高位會談은 分斷 46年만에 차

음으로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를 導出했지만, 發表되자마자 核查察問題를 뒤로 미룬 것에 대해 國內外에서 비판의 輿論이 비등하고 있다. 美國과 日本에 接近하려는 北과 南北頂上會談을 하루 빨리 成事시켜 보려는 南의 底意가 맞아 떨어져 알맹이 없는 合意書를 요란하게 공표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現實이다. 또 하나의例를 들면 美國이 南韓에서 모든 核武器를 撤收했으나 韓半島는 계속 美國의 核雨傘안에서 遠隔抑制(Extended Deterrence)의 保護를 받는다고 政府는 力說하고 있다. 美軍의 核武器가 없는데 北이 再侵하면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民心을 수습하려는 努力에서 나온 發想이겠지만 이는 核雨傘의 概念을 너무나 我田引水격으로 解釋한데 不過하다. 敵의 攻擊을 받을 때 核武器로 報復하려면 平素에 Target Doctrine이라고 불리는 표적지침이 마련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美國의 어떠한 文獻에서도 北韓內의 軍 또는 民間 施設이 美核武器의 표적으로 指定되어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前駐韓美軍司令官 메네트리大將이 1988년에 밝혔듯이 美國은 南韓의 防禦를 위해 核武器를 使用하게 되는 상황을 想定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Cushman, 1988). 그러므로 韓國政府가 意味하는 核雨傘이란 美國이 願하면 地球上의 어느 구석에도 美國이 核攻擊을 加할 수 있다는 常識의 見解에 不過하지 南韓이 在來式 또는 核武器의 攻擊을 받을 때 美國이 核武器로 報復하리라는 保障은 절대로 아님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南韓은 核問題에 관해서는 늘 美國의 눈치만 보아왔고 이제 北의 核武器 獨自開發로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核政策 不在현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⁷⁾

南韓이 獨自의인 核政策을 수립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에도 美國과 日本은 계속해서 北韓에게 國際原子力機構의 核安全協定에 署名할 것을 독촉하여 왔으며 지난 12月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있은 스티븐·솔라즈 美下院 亞太小委委員長의 訪北을 통해 強力한 메시지를 金日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盧泰愚大統領의 核不在宣言에 만족하지 않고 부시大統領이나, 베이커國務 아니면 체니國防長官 등 美

(7) 南韓의 「無氣力한 核政策」에 대해 어떤 論評家는 盧大統領이 北韓으로 하여금 美國과 日本으로부터 核查察을 받아 들이는 대신 最大限의 報償을 받게 하려는 大乘의 次元의 配慮를 하고 있다는 主張을 폐기도 한다(朝鮮日報 시카고판 1991. 12. 19).

行政府의 高位當局者가 駐韓美軍의 核武器 撤收를 확인해 주어야만 核安全協定에 署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또 南韓이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提議한 群山과 寧邊의 同時示範查察에 대해 否定的인 입장을 表明하고 寧邊核施設에 대한 國際原子力機構의 查察을 수용하는 대신 南韓內 美軍基地에 대해서는 北韓側이 查察해야 한다는 從前의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고 한다.⁽⁸⁾

金日成—솔라즈 對話의 内容을 자세히 檢討하면 核安全協定에 署名할테니 그 다음의 查察問題는 美國과 직접 協商하자는 것이 要旨이다.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北韓外交部는 12月 23日에 發表한 聲明에서 다음과 같이 밝하고 있다.

『……사찰을 진행하려면 응당한 우리와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한 주인인 미국과의 협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해당한 문제들과 핵위협 제거문제가 협의 되어야 할 것이다.』⁽⁹⁾

北韓의 이러한 主張은 두가지를 目標로 한다.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美國과의 二者間 對話를 통해 南韓의 位相을 낮추고 美國으로부터 사 실상의 外交的 承認을 얻어 내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核安全協定의 署名과 查察을 分離함으로써 발등의 불안 國際社會의 批判을 모면 한 뒤 時間의 餘裡을 갖고 對美·日 協商을 推進하자는 속셈이다. 사실 北韓이 核安全協定에 署名하는 것은 核問題解決의 첫걸음에 不過하고 核查察에 이르기까지는 實際로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北韓憲法 第96條에 의하면 條約의 批准은 國家元首인 主席의 署名만으로 可能케 되어 있지만 金日성이 즉시 이를 批准할 확률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또 批准을 거쳐 核安全協定이 發效된 후에는 國際原子力機構 事務局에 30日 以內에 기존 核物質, 즉 查察對象을 申告해야 하며, 이때부터 임시사찰은 可能하다. 그러나 定期查察은 이 報告와 國際原子力機構 事務局의 確認을 거쳐 兩當事者間에 補助約定書가 協定發效후 90日 以內에 締結돼야 시작된다. 그러니 지난 1985年 核擴散禁止條約에 加入하고 18個月 以內에 核安全協定을 發效시켜야 하는 國際原子力機構의 規定을 어긴채 6년만에 署名하겠

(8) 한국일보 시카고판 1991. 12. 24.

(9) 朝鮮日報 시카고판 1991. 12. 24.

다고 나선 北韓이 이 모든 節次를 제대로 준수할지는 커다란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北韓의 核問題가 解決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時日이 所要될 터인데 그러면 그동안 南韓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南韓은 『美國의 눈치나 보며 北韓에 利用당하는 受動用 姿勢』에서 벗어나 核問題에 관해 제몫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事態를 냉철히 分析한 다음 政權이 아닌 國家 利益의 次元에서 政策方向을 選擇하고 이에 대해 國民的 合意를 이룩한 후 實現可能한 政策부터 果敢히 推進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核問題에 관해 南韓이 處한 立場을 살피는데 考慮해야 할 事項들은 무엇인가?

첫째, 北韓의 核武器 開發이 國際的 이슈가 된 것은 北의 核이 南韓安保에 危脅이 되기 때문이기 보다는 美國이 主導하는 世界秩序에의 挑戰이라는 認識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核武器 保有에 관해 美國이 이스라엘과 이라크에 보인 反應을 對照해 보면 이는 自明해 진다.

둘째, 核武裝選擇權이 없는 南韓은 北韓의 核問題 解決에 있어서 직접적인 當事者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美國이 北韓과 二者間의 對話를 하든가 안하든가는 爭點의 핵심과는 상관이 없는 절차상의 問題일 뿐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美國이 北韓과 公式으로 對坐할 것이고 또 北韓이 굳이 美國과의 二者會談이라는 要式行爲가 필요없다고 여길 때는 南韓의 체면을 바준다는 名分을 내세워 이의 要求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째, 南韓이 核問題에 관해 北韓에 대해 쓸 수 있는 「지렛대」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南韓이 무어라고 하든지 北은 제갈길을 갈 것이라는 뜻이다. 反面에 南韓은 美國에 대해서는 상당한 影響力を行使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國이 自國의 利益과 世界秩序의 유지를 위해 南韓을 필요로 하는限, 南韓은 北의 核카드를 對美協商用으로 有效適切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의 세가지 判斷을 意味 있다고 받아 들이면, 그 다음엔 이에 根據한 政策方向을 設定해야 한다. 現在로서 그러한 政策方向은 對美協商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藥이 입에는 쓰듯이 南韓政府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處方일 수도 있다. 北韓의 核武器 開發로 온 世界가 시끄러

운데 이에 관해 우리가 나서서 對北協商을 主導하지 않으면 體面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도 된다. 그러나 核問題에 관한 客觀的인 상황을 國民에게 說明하고, 長期의 眼目에서 國益에 도움이 되는 것은 輕舉忘動하는 것이 아니라 美國과 政治·經濟·軍事의 名分野에서 여러가지 懸案들을 協商하는 過程에서 實利를 쟁기는 일임을 說得하면 國民의 合意를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對北韓 軍事會談에서 核問題를 討議하지만, 그 討議의 內容과 進展속도를 南韓의 對美協商結果와 步調를 맞추라는 것이다. 이러한 發想의 轉換에 成功하면 美國 다음으로 南韓에게 중요한 日本에 대해서도 核카드를 使用할 수 있게 될 것은 自明하다. 核카드를 使用함으로써 南韓이 얻을 수 있는 利益과 또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本節에서는 아래에서 다룬 軍事問題에 관해서만 論議하고자 한다.

(2) 駐韓美軍의 役割變化

軍事分界線(DMZ) 南方에 美地上軍을 駐屯시킨 本來의 目的是 北韓의 南侵이 있을 때 美國의 自動介入를 保障하는 「인계철선」(Tripwire) 役割을 하게 합이었다. 1953年의 休戰以來 駐韓美軍은 이 機能을 충실히 수행하여 韓半島에서 戰爭을 抑制해 왔다. 그러나 東北亞의 政治·軍事的 環境의 變化로 말미암아 駐韓美軍은 遠隔抑制의 機能을 초월하여 美國 對外政策의 중요한 道具로서 四強의 均衡을 維持하는데 더 큰 寄與를 하게 되었다.

戰爭抑制 말고도 駐韓美軍이 맡게 된 役割은 여러가지이나 여기서는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는 駐韓美軍이 東北亞의 현상(Status Quo)을 지켜주는 一種의 平和維持軍의 性格을 띠게 된 事實이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南韓이 新興工業國이 되면서 부터 東北亞의 四大強國은 韓半島의 統一可能性에 대해 不安全感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東歐圈이 崩壞되고 獨逸이 統一되는 등 세상이 아주 많이 變했지만, 그래도 근 7千萬의 人口에 150萬 大軍을 거느릴 統一韓國이 美·蘇·中·日이 그동안 東北亞에서 누려온 影響力を 잠식할 것은 變하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四強중 어느 나라도 韓半島가 빠른 將來에 統一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推

(10) 駐韓美軍의 役割이 어떻게 變해 왔으며 또 美國의 對外政策의 變化에 따라 어떤 方向으로 變形될 것인가에 대한 理論的이고 經驗的 分析은 朴東煥(1990) 參照.

定할 수 있으며, 이런 意味에서 駐韓美軍이 갖는 國際政治의 役割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平壤의 視角에서도 規模는 北韓보다 작지만 빠른 속도로 現代化하는 南韓의 軍事力에 危脅을 안 느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北侵과 南侵을 함께 막아주는 駐韓美軍의 緩衝裝置的(Buffer) 役割을 是認하는 것 같기도 하다.⁽¹¹⁾ 둘째로 駐韓美軍이 맡게 된 또 하나의 役割은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擧措하는 것이다. 每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3百億弗 수준의 防衛費를 쓰는 日本自衛隊은 25萬명 수준의 少數兵力을 갖고 있지만 最尖端 武器로 武裝한 精銳軍이다. 最近 걸프戰에는 掃海팀을 보내 戰後解理를 도왔고 지금은 UN의 平和維持活動(PKO)에 自衛隊 兵力を 參與시키느냐의 問題를 가지고 日本議會內에서 열띤 攻防戰이 벌어지고 있다. 資源보급로인 1千海里의 水域을 지킬 軍事的 能력을 이미 갖고 있는 日本이 亞太地域에서 軍事大國으로 君臨하는 날 이 地域의 政治版圖는 크게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이런 脈絡에서 韓國과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은 日本의 軍事力이 더 以上 빠른 속도로 張창하지 않도록 制動을 걸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駐韓美軍—그중에서도 地上軍—은 韓半島의 軍備統制協商에서 큰 爭點이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奈—워너(Nunn-Warner)修正案에 따라 現在進行중인 駐韓美軍의 단계적 減縮에 대해 北韓이 이렇다 할 反應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觀點에서 理解가 可能하다.⁽¹²⁾ 바꾸어 말하면 財政的理由로 美國이 駐韓美軍의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데 北으로서는 이에 대해 내놓고 환영이나 비난을 할 수 없는 立場에 處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駐韓美軍의 活動중에서 年例行事인 팀스피리트訓練에 대해서는 北韓이 過敏한 反應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韓美兩國軍의 合同機動訓練인 팀스피리트는 防禦를 主目的으로 한 것이고 또 北이 응하지는 않고 있지만 參觀團을

(11) 지난 9月 28일부터 8일간 金容淳 北韓勞動黨 國際部長겸 秘書 초청으로 北韓을 방문한 濟洲의 核專門家 피터·헤이즈에 의하면 北韓官吏들은 駐韓美軍이 南北韓사이에서 戰爭抑制의 役割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주목할만한 發言을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1991. 10. 19).

(12) 奈-워너修正案에 따르면 駐韓美軍의 兵力規模을 1단계(1990~1992년)에서 7천 명(空軍 2천, 地上軍非戰闘要員 5천)을 撤收시키는데 이어, 2단계(1993~1995년)에 선 美第 2師團 兵力構造의 再調整 및 減縮을, 그리고 3단계(1996~2000년)에 선 韓國軍이 主導的 役割을 맡고 美軍이 支援役割을 하는 軍事體制로 바꾸기로 한바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95년까지 美軍의 兵力を 3만명선으로 維持하고 그다음에도 第 2師團兵力의 상당수를 韓國에 남겨둘 것이라고 한다(朝鮮日報 1991. 10. 22).

보내라는 招請을 平壤側에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經驗으로 보아 兵力의 規模나 動員된 裝備에 있어서 팀스피리트는 美國이 友邦과 함께 벌리는 訓練中에서 가장 큰 것에 속한다. 또 將次戰에서 緊急對應軍(Rapid Reaction Forc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생각할 때, 北으로서는 팀스피리트訓練을 달갑게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 訓練은 有事時 美軍의 自動介入 시나리오를 再確認하는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北이 不安全感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걸프戰에서 威力を 떨친 再來式 突端武器의 使用訓練은 北에게는 危脅的 要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팀스피리트訓練에 대한 北韓의 이러한 認識은 南北軍事會談에서 南쪽이 이 訓練을 아주 强力한 協商카드로 使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믿어진다. 팀스피리트訓練의 規模나 性格을 바꾸는 代價로 南韓과 美國은 北으로부터 實질적으로 중요한 讓步를 받아 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말이다. 北이 팀스피리트訓練으로부터 攻勢的 危脅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를 北의 攻勢的 危脅要素와 맞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例를 들면 南의 立場에선 平壤一元山線 以南에 集中配置된 北의 兵力과 火力이 가장 큰 攻勢的 危脅이므로, 이의 縮小를 代價로 要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은 팀스피리트訓練의 中止를 北의 核安全協定署名과 연계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南韓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核을 抛棄하는 것은 北에게는 큰 政治・軍事的 費用이 드는 일이 아니다. 이와 反對로 팀스피리트訓練은 南쪽이 가진 가장 비싼 協商카드로 생각되는데, 이를 一時的 便宜를 위해 北에게 싸게 내어 주는 愚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軍備의 減縮

兵力과 裝備를 한데 묶어 軍備라고 할 때, 南北韓의 軍備減縮協商에서 가장 큰 爭點으로 浮上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非對稱的(Asymmetrical) 減縮을 成事시키느냐는 問題일 것이다. 構造的 軍備統制力案으로 여기서 非對稱的 減縮을 重視하게 된데는 두가지前提가 있다. 하나는 軍備減縮의 기준을 「同數의 原則」에 두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韓의 軍備가 서로 다른 規模와 性格을 지니고 있음을 認定하자는 것이다. 南北韓이 『이 정도의 兵力과

裝備는 꼭 필요하다』는 最小值에 合意하게 되면, 그 다음엔 兩쪽이 각기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部分부터(따라서 非對稱的) 減縮을 시작하여 相對方의 수준까지 낮추고, 그리고 나서 兩쪽의 같아진 수준을 함께 더 낮은 수준으로 減縮하는 것이 이 接近方法의 요체이다.

흔히들 가장 손쉬운 軍備統制의 方法으로 同率減縮方案을 이야기한다. 例를 들면 兩側이 각기 20퍼센트씩 軍事力を 減縮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對稱的 軍縮은 南北韓에는 適用하기 어려운데 그 理由는 兩側 軍事力의 規模와 構成이 너무 差異가 나기 때문이다. 兵力의 경우만 봐도 南北韓이 同率減縮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線에 가서는 南韓이 北韓의 攻擊을 막을 수 있는 最小限의 人力水準 밑으로 떨어질 可能性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南쪽에서 받아 들일 수 없음은 自明하다. 同率減縮을 하다보면 軍備統制가 本來의 意圖와는 달리 軍事的 安定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¹³⁾

非對稱的 軍備減縮方案을 南北韓間의 協商에 適用시키려면 우선 兩側이 未來에 必要로 할 軍事力を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 相互不可侵에 일단 合意는 하였지만 南北間에는 아직도 不信의 壁이 높으므로, 이 숫자가 낮게 나오리라는 것은 期待하기 어렵다. 아니, 어쩌면 兩側은 所要軍事力의 「同數化」에 合意하지 못할 可能性마저 있다. 그러나 軍事力を 現在보다 낮은 수준에서 同數化함이 軍備統制를 성공시키는 첫걸음이라는데 兩側이 認識을 같이 하는 것 부터가 중요하다.

여기서 南北韓이 考慮해보도록 勸하고 싶은 숫자가 있는데, 다름아닌 北大西洋條約機構(NATO)가 유럽在來式戰力減縮을 協商하는 過程에서 授用한 所要軍事力 수준이다.⁽¹⁴⁾ NATO의 公式에 의하면 1個師團이 25km의 前線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韓半島의 休戰線을 커버하는데는 兩側이 각기 10個師團을 필요로 한다는 計算이 나온다. 여기에다 약간의 代替兵力을 加算하면 약 20만명 정도의 地上軍을 維持해야 하고 海空軍까지 합하면 한쪽의 適正最少兵力은 30만명線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30만이라는 숫자는 NATO의 經驗에 근거한 하나의 例에 不過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北

(13) 軍備減縮의 여러가지 理論的 模型에 관해서는 吳寬治(1991) 參照.

(14) 유럽在來式戰力減縮條約(CFE)의 內容과 CFE의 經驗이 어떻게 韓半島에 適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 Dean(1991)이 體系的으로 論議하고 있다.

韓이 主張해 온 30만→20만→10만에로의 3단계 兵力減縮案은 現實性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1세기에 韓半島가 國際秩序에서 차지할 政治·經濟的 중요성을 생각하면 南北韓 합쳐 60만이라는 兵力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所要軍事力의 最小同數化가 非對稱的 軍縮의 시작이라면, 이의 完成은 兩側이 非對稱的 軍縮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이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兵力과 裝備 모두 優位에 있는 北韓이 먼저 여러 部門에서 減縮을 시작하여 南韓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實踐은 어려운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南韓이 당장해야 할 일은 北韓이 非對稱的 減縮을 할 수 있도록 與件을 助成하는 것이다. 具體的인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不可侵合意가 南韓政府와 國民의 真心을 反映한 것이고 美國도 이를 보장한다는 것을 北韓이 確信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北이 先制攻擊을 하지 않는限, 南은 武力を 使用치 않겠다는 것을 거듭 確認해야 할 것이다.

둘째, 北韓이 攻勢的으로 配置한 兵力과 裝備를 減縮해도 北의 安保에는 아무 支障이 없다는 것을 說得해야 한다. 攻者와 防者가 각기 필요로 하는 戰力を 어떤 比率로 잡든지, 北은 現兵力을 아주 大幅으로 줄여도 自體防禦에는 不足함이 없을 것은 分明하다. 다만 그동안 쌓아 놓았던 것을 허무는데서 오는 不安全感이 問題인데, 이는 南韓도 北쪽보다는 小幅이 되겠지만 實질적인 軍縮을 斷行함으로써 어느 정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兩側 모두가 多量으로 갖고 있는 납은 攻擊用 武器(在來式 野砲 등)을 減縮하는 대신, 尖端防禦裝備를 開發 또는 導入하도록 合意하는 것이다. 特型 防空砲이나 對誘導彈(ABM) 武器를 配置하면 兩側의 防禦成功率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軍事的 信賴構築이라는 波及效果까지도 낳게 되리라고 본다.⁽¹⁵⁾

네째, 軍備減縮協商은 在來式 武器에 局限해야지 北의 核武器 開發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賢明하다. 核武裝選擇權이 없는 南韓으로서는 核과

(15) 걸프戰에서 有名해진 패트리어트 防空體制가 南韓에 머지 않아 導入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패트리어트는 誘導彈基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武器이기 때문에 首都圈의 방어에는 별큰 도움이 못될 것이고 또 韓半島같은 地型에서 제대로 作動할지도 疑問이지만, 北의 스커트-B 誘導彈에 대한 防禦網이라는 뜻에서 南韓住民의 心理的 要求는 充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在來式 武器를 한데 둑어 協商할 경우 죽도 밥도 못 만드는 結果를 招來할 위험이 있다. 北도 核카드는 對美・日用이니 만큼 對南協商에서마저 이를 쓰려고 하면 南韓의 심한 反撥을 살 憂慮가 있다. 만약 南韓의 保守勢力を 자극하여 核武器 自體開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는 北에게도 바람직한 일 이 아닐 것이다.

(4) 軍事費 減縮

韓國戰 休戰 以來 근 40년간 南北韓은 軍事的 競爭體制를 維持해 왔다. 北韓은 1962년부터 소위 「四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蘇聯과 中國의 支援下에 社會 모든 部門에 우선하여 軍事力 建設에 總力量을 集中해 왔으며 南韓은 北韓보다 12년이나 늦은 1974년부터 本格的인 軍事力 建設을 推進해 왔다.

비록 南韓의 戰力增强計劃이 늦게 시작했지만 高度로 成長하는 經濟力에 힘입어 1976년부터 단년도 軍事費 支出에 있어서 北韓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0년 현재 南韓의 軍事費는 93.3億弗로서 北韓의 49.6億弗에 比하면 약 1.9倍 수준이 되었다. 또 武力發展 投資費에 있어서도 1986년도부터 단년도 投資費面에서 南이 北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投資費 累計에서 보면 아직도 北이 앞서 있으며 1991년 현재 南은 北의 80퍼센트 수준에 不過한 實情이다(國防白書, 1991~1992).

南北의 軍事費를 비교하면 北은 國民總生產(GNP)의 約 22퍼센트를 軍備에 使用하는 反面 南의 國防費는 GNP의 4퍼센트에 不過하다는 計算이 나온다. 南韓의 GNP가 北의 10倍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軍事費가 北의 經濟에 끼치는 負擔은 絶對的으로나 相對的으로나 莫重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國民總生產의 거의 4분의 1을 軍事費로 쓴다는 것은 強한 經濟力を 갖고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破產직전의 北의 經濟로서는 이를 오랫동안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또 南韓과 相對的 立場에서 볼 때 現在의 軍事費 比例는 1.9 對 1이지만, 南韓의 지속적 經濟成長으로 앞으로는 이 障差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軍備統制協商에 臨하는 北의 姿勢는 당연히 軍事費를 節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들의 3단계 兵力減縮 提案도 이런 脹絡에서 檢討되어야 한다. 兵力減縮은 軍事費 節減의 效果를 낼 뿐 아니라 北이

當面하고 있는 建設 및 生產 分野의 人力難 解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自明하다.

國防費 減縮은 適正線에서만 이루어진다면 長期的으로 보아 南韓에도 利得이 될 것이 틀림없다. 다만 軍事費 減縮의 壓力を 南韓은 北韓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對北韓 協商에서 南韓은 軍事費 減縮을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軍事費 減縮에 同意해 주는 代價로 南韓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가지를 北에 要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信賴構築에 도움이 될 軍事的 透明性 增大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軍事費 減縮은 北의 經濟를 起死回生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活力素이며, 따라서 南도 戰爭防止에 決定的 寄與를 할 軍事的 信賴構築을 代價로 要水함이 妥當하리라고 본다. 또 透明性 提高의 한 方法으로 北韓의 核施設에 대한 查察도 包含시킴이 자연스러운 歸結이라고 생각된다.

5. 結論：統一後의 軍備所要와 軍備統制

지금까지 韓半島의 核武器, 駐韓美軍의 役劃變化, 軍事力의 減縮 및 國防費의 削減 등 南北韓間의 가장 尖銳한 軍事 懸案을 分析하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對應方案을 提示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懸案의 爭點들만 어느 정도 만족하게 解決한다면 南北韓間의 軍事關係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進展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短期 또는 中期的 觀點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長期的 眼目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變數가 빠져서는 안됨을 指摘하고자 한다. 그 變數는 다름아닌 統一이다.

앞으로 5년, 10년, 또는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韓半島가 統一이 된 다음 韓國이 가져야 할 軍事力은 대략 얼마나 돼야 하고 그때의 軍構造는 어떤 形態여야 하는가? 이 質問에 대한 答을 당장 求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質問 自體를 考慮하지 않고 南北韓이 軍備統制協商을 推進한다면 이는 民族史的 見地에서 커다란 過誤를 犯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中·短 期的 利益에 눈이 어두워 長期的 軍備所要를 等閑視한다면 5千年 歷史에서 술하게 당한 外侵의 쓰라림을 또 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統一後에 所要될 軍事力과 軍構造를豫測하려면 먼저 統一後의 韓國이 直面할 危脅의 性格을 分析하고 그에 따른 安保目標를 設定해야 한다. 우선

統一後의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를 생각해 보면 平和와 協助 보다는 不安定의 時代를 맞게 될 確率이 높다. 만약 南北統一 때까지 存續한다면 蘇聯邦을 代替한 獨立國聯邦(CIS)과 이의 中心部인 러시아共和國은 아시아의 大國으로 君臨하기 위해 東北亞 地域에 軍事·經濟的 投資를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對美·日 經濟關係를 主軸으로 하여 아시아·太平洋 市場에서 자리를 굳힐 것이며 아시아의 宗主國으로서의 地位를 되찾으려 할 것이 分明하다. 어느 面에서는 벌써 軍事大國이 되어 버린 日本은 명실공히 亞太地域의 「떠오르는 별」로 半세기前에 失敗로 끝난 東北亞共榮圈의 꿈을 復活시키고 있는 정조를 여러 곳에서 發見할 수 있다. 비록 「지는 太陽」이지만 世界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霸權國인 美國은 21세기를 主導할 亞太經濟圈에서 발을 빼 수 없고 어떤 形態로든 自國의 饗影力を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未來의 東北亞 國際秩序는 「單一多極體制」(Uni-multipolar System)를 맞게 되리라고豫見할 수 있다. 美國이 單極을 意味하며 東北亞 國際關係의 큰 열개를 만들고 또 이를 지키는 役割을 遂行하지만, 그 틀안에서 四強이 角逐戰을 벌이는 權力均衡의 體制라고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19세기에 列強이 東北亞를 나눠 먹으려던 形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를 것이 있다면 統一韓國이 이제는 단순히 帝國主義의 먹이가 아니라 規模는 작지만 列強의 隊列에 낼 수도 있으리라는 점이다.

물론 統一된 韓國이 四强중의 어느 하나하고도 맞붙어 1대 1로 싸울 能力을 갖지는 못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四强중 어느 하나도 韓國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없을 정도로만 韓國의 國力과 地位가 커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東北亞의 主要한 力量(Regional Player)으로 浮上한 韓國이 追究해야 할 安保目標이다. 이러한 安保姿勢는 「고슴도치 戰略」을 필요로 하고 「制限的防禦充分性」⁽¹⁶⁾에 立脚한 軍備建設을 要水함은 이미 널리 舉論된 事實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統一韓國의 軍事力이 列強에 攻擊的 危脅이 될 수는 없지만, 侵略軍에게 莫大한 被害를 입힐으로써 潛在敵國이 侵略으로부터 얻을 利益보다 損失이 너무 커서 攻擊을 自制하게 되는 程度가 되어야 한다는 主張이다.

그러면 이러한 安保目標를 達成하는데 所要되는 軍事力은 具體的으로 어떤 크기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詳細한 討論은 本節의 目的과 어긋 나므

(16) 「制限的防禦充分性」의 論理는 車榮九(1991)에 比較的 자세히 紹介되어 있다.

로 省略하고 대충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한다.

첫째, 未來의 世界에서는 經濟力으로 싸우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軍事力은 經濟力を 保護하는 二次的 役割을 하게 된다. 따라서 兵力은 少數精銳의 原則에 따라 充員하여 되도록 많은 人力이 生產現場에 投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現役兵은 人口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 線에서 유지하고 그 대신 勤員豫備軍體制를 效率的으로 運營하여 有事時에 대비해야 한다. 人口의 1퍼센트면 70萬名 정도가 되는데 東北亞 情勢를 考慮할 때 그 以下로 크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 軍을 少數精銳化하자면 반드시 裝備를 現代化해야 한다. 兵力を 減縮하는 데서 오는 經費節減 以上으로 더 많은 投資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軍備縮小와 軍費增强을 동시에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21세기에 東北亞의 主役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必要한 投資가 아닐 수 없다. 南北韓이 軍備統制를 協商하는 過程에서 合意하기 어려운 分野가 裝備의 尖端科學化이지만, C³I나 防空體制 등등 防禦用 裝備에 過重하고 또 經濟的으로 여유가 있는 南韓이 먼저 시작하도록 한다면 北韓도 反對할 소지가 줄어 들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軍備는 南北對決이 主目的이 아니고 韓民族의 生存을 保障하는 南北韓의 共同資產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車榮九, 1991:18).

세째, 軍構造도 더욱 現代化하여 戰略을 수립하는 機能과 이를 遂行하여 外部로부터 오는 危脅에 對應하는 機能을 分離하고 이 둘 사이를 有機的으로 連結하는 體制를 定着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戰爭에서는 陸・海・空을 총망라한 總體的 戰鬪가 벌어질 것이므로 合同參謀本部는 戰略集團으로 각 軍은 即應戰力으로 삼는 統合軍制를 發展시킴이 世界的 추세이고 統一韓國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結論的으로 軍備統制는 南北韓의 共同安保를 위해 追究하는 것이지만, 유럽처럼 減縮一邊倒로만 推進할 수 없는 것이 韓半島의 地政學的 現實이다. 따라서 南北韓은 統一後의 軍備所要까지도 내다보고 이를 근거로하여 軍備統制를 協商하는 슬기로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防白書

1991~1992 서울 : 大韓民國 國防部.

吳寬治

1991 “軍備統制政策,” 1991. 10. 19 高麗大學校 平和研究所에서 發表한 論文.

朴東煥

1990 (編著). 駐韓美軍의 戰略價值, 서울 : 韓國國防研究院.

車榮九

1991 “통일시대를 지향한 국방정책,” 1991. 10. 18 韓國國防研究院主催 國防學術討論會 發表 論文.

Cushman, John H.

1988 “Command Arrangements in Korea: Issues and Options,” Paper presented at CSIS/KI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ROK-U.S. Security Relations, Seoul, September 12-13, 1988.

Daris, Paul K.

1988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s Central Region*,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Dean, Jonathan

1991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ow is the European Experience Applicabl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p. 67-84.

Goodby, James

1990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ng Agenda,” in the Proceedings of the KIDA/CSIS Workshop-90 entitled *Tension Reduction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Nov. 8-9, 1990.

Lim, Dong-Won

1991 “An Urgent Need for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p. 49-66.

Ohn, Chang-Il

1991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p. 219-239.

Park, Tong Whan

1990 “South Korea,” in Thomas, Raju G.C. and Bennett Ramberg (eds.). *Energy and Security in the Industrializing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pp. 35-53.

1991 "Issues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Aug. 29-Sep. 1, 1991.